

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05.

부일장학회 강탈

고 김지태 씨 장남

김영구

부일장학회 강탈 진상

부일장학회 강탈 진상

고 김지태 씨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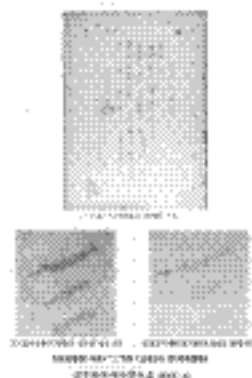
사건 개요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5.16 쿠데타 직후 주동세력들이 쿠데타의 명분을 세우고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만연했던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당시 재산축적 과정을 두고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전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를 희생양으로 지목, 비리사실을 입수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 62년 4월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후,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와「국가재건최고회의」관계자들이 김지태 및 그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석방 등 신변 안전보장을 내세워 재산헌납 압력을 행사했고 62년 5월 24일 김지태는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후 5월 25일 구속 상태에서 자발적 기부헌납 형식으로 부산일보 등 언론 3사 주식과 부산 시내 소재 토지 100,147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며 62년 6월 20일「5.16장학회」에 헌납한다는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한 후 6월 22일 공소취소로 석방되었고 62년 7월 7일 군사정부가 박정희 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시에 따라 김지태 헌납재산을 토대로「5.16장학회」를 설립한 과정에 대한 논란임

자료 조사 및 분석

1) 국정원 보유자료 : 94건 1,147쪽

- 김지태 동향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67건 504쪽과 경찰 등 타 기관 작성 존안 보고서 및 참고자료 27건 643쪽을 비교 분석
- 김지태 재산헌납의 강제성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당시 중정 및 최고회의측의 김지태에 대한 평가 등 일부 관련 자료 확인



2) 타 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 「서울시교육청」 보관 「5.16장학회 기본재산 무상양도 허가공문」 등 117건 327쪽과 「국가기록원」 보관 「마포교도소 수용자 김지태 명부」 등 7건 158쪽
- 김지태 재산헌납의 강제성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당시 중정 및 최고회의측의 김지태에 대한 평가 등 일부 관련 자료 확인
- 국회 보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제87차 상임위 회의록」 1건 25쪽, 「부산동부지원등기소」 보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 217건 752쪽 검토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1건 23쪽

- 김지태 명의 기부승낙서 등 위·변조 의혹 문건 7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명날인의 차이점 및 기부날짜 변조사실 확인

4) 유족 제공 자료 : 35건 400쪽

- 김지태의 처 송혜영 등 유족이 보관하고 있는 「62년 7월 31일자 황용주의 편지」 사본 등을 입수하여 내용 검토

5) 부산일보·정수장학회 제공 자료 : 9건 48쪽

- 부산일보 전무 조용생이 제공한 「부산일보 손익 계산」 등 사건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내용 검토

6) 일반 자료 : 165건(권) 5,900쪽

- 단행본 등 관련 책자 20권 2,500쪽, 월·주간지 12권 600쪽, 신문·방송·인터넷 자료 25종 127건 800쪽, 논문 6건 등 기타 자료 2,0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 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

조사 결과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총 12,364명에게 17억 7,03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는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 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한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자신의 진술이 과정을 일으키자 이를 번복)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유우동 등 임직원 10여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黃龍珠)의 권유에 따라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申植秀)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6월 20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高元增)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 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기부승낙서 위·변조 의혹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상의 날짜도 한자 '六月二十日'에 한 획을 가필하여 '三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는 김지태가 6월 22일 석방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이라면 김지태가 아직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6월 30일이라면 석방된 다음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헌납의 자발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됨



'강제 헌납' 재산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 한 재산은 총 85,270,279원임

- 주식 : 총 53,100주 (평가액 34,876,096원)
- 부산일보 : 100% (2만주, 평가액 19,285,649원)
- 한국문화방송 : 100% (2만주, 평가액 10,446,342원)
- 부산문화방송 : 65.5% (13,100주, 평가액 5,144,105원)
- 부동산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0,147평 (평가액 50,394,183원)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0,147평(253필지)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 결의로 정부에 토지(도로부지로 편입된 6필지를 제외한 99,451평)를 기부출원한데 대해 감사공문을 보냈음

언론 관련 재산 헌납 경위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용주였음 황용주는 수감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부문은 내놔야 안되겠냐"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 *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종한은 "문화방송을 넘겨주자고 한 건 황용주 장난"이라며 "주연은 박 대통령이고, 조연은 황용주와 국제신보 사장 둘이 맡았다"고 주장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행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됨

재산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 박정희 의장은 "기부 받은 재산이 자주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이후 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 등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신직수·고원증 등)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결론 및 의견

결론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5.16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 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헌납'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5.16장학회」소유가 되었음.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부일장학회」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들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결국 동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위원회 의견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5.16장학회」를 거쳐「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처럼 운영되었던「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향후모법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박정희, 그는 언론이 탐나서 몸부림쳤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한겨레21 2005년 8월2일자 기고)

박정희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부일장학회와 경향신문사 강탈 이런 '노후대책' 마련해 놓고도 왜 그리 권력에 연연했을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는 7월22일 5·16 군사반란 직후 부일장학회 등 헌납과 <경향신문>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원회로서는 7개 우선조사 사건에서 처음으로 하나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사건 조사에 깊이 간여한 민간위원으로서 시원함과 두려움, 그리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시원하다 한 것은 조사 중인 사건인데다 뒷산에 대밭조차 남아 있지 않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도 외치지 못하던 치지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일도 많은데 다 매일 보는 자료는 진실위원회 조사 사건 관련 자료인데, ‘역사이야기’에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하니 준비 부족으로 힘들 때가 많았으나, 적어도 한두번은 그런 걱정은 덜게 되었다.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혹시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착잡함은 강파들이 국가를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2차 자료로만 보아 오다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고 1차 자료로 확인하면서 들게 되는 심정이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칼만 안 들었지”란 말을 많이 쓴다. 저들은 분명 칼은 안 들었다. 그러나 탱크를 앞세워 나라를 빼앗은 자들이 아닌가? 칼 든 조무래기 강파들 잡아넣고.

설립도 안된 5·16장학회에 헌납?

부일장학회 등 사건은 1962년 당시 첫손에 꼽히던 재력가인 김지태를 사소한 혐의로 구속시켜 놓고 부일장학회 명목의 개인 소유 토지 10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 100%를 ‘헌납’ 받고 풀어준 사건이다. 김지태에게 부정 축재 혐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혐의는 이미 1961년 말에 일단락됐고, 김지태와 함께 부정 축재 처리대상이 되었던 기업인 중 다시 구속됐다가 재산을 헌납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사람은 없다. 사실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 이전 부산 군수까지 사령관을 지냈으며, 대구사범 동기동창인 황용주가 <부산일보> 주필로 있었기 때문에 김지태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일부에서는 박정희가 황용주를 통해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는데 김지태가 이를 거절하여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하지만, 황용주는 박정희의 부탁을 김지태에게 전하지 않았고 뒤에 그 사실을 박정희에게 해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박정희의 김지태에 대한 앙심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또 일부에서는 김지태가 친일파이니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김지태가 친일파인지 여부는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만에 하나 김지태가 친일파였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박정희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친일을 이유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단 말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희가 김지태에게서 빼앗아 5·16 장학회로 넘긴 재산의 성격을 보면 잘 나타난다. 김지태는 그 당시에 수십억대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지태는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언론 3사의 주식을 ‘헌납’ 하게 되었는가? 바로 박정희가 언론사를 원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재산이 탐나서 김지태를 잡아넣고 재산을 내놓으라 했다면, 김지태가 ‘헌납’ 한 부산 시내의 토지 10만여평도 5·16 장학회로 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5·16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표방하면서도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이던 이 땅은 국방부로 소유권을 옮기고, 언론 3사의 주식만으로 5·16 장학회를 만들었다.



박정희에게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황용주였다. <부산일보> 주필이던 황용주는 김지태가 <부산일보>를 내놓자 <부산일보> 사장이 되었고 이어 한국문화방송 사장이 되었으니, 황용주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박정희 다음가는 이익을 본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황용주의 영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박정희와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황용주는 5·16 군사반란 직후 용공분자로 입건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는데, 황용주가 <부산일보> 사장이 되었을 때 권력 핵심 내에서 상당한 견제가 있었다. 황용주는 결국 <문화방송> 사장으로 있던 1964년 가을, 통일 문제에 대해 잡지 <세대>에 발표한 논문이 문제가 되어 김형욱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지태는 구속된 상태에서 5월25일 포기각서를 쓸 때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지만, 6월 20일 작성된 기부승낙서에는 헌납받을 곳이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5·16 장학회로 되어 있다. 5·16 장학회와 그 소유로 편입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임원을 보면 박정희, 황용주와 대구사범 동창이나 대구 출신 인사들이 유달리 눈에 많이 띈다. 5·16 장학회는 박정희의 측근들이나 친인척들로 이사진이 구성됐고, 박정희 사후에는 이름마저 박정희와 육영수에 한 글자씩 따서 ‘정수장학회’로 바꾼 채 박정희 유족들에 의해 운영됐다. 국가에 바친 재산이 이렇게 사유화됐으니, “짐은 곧 국가”라고 할밖에...

강제성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김지태가 자기 의사에 반해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이유는 생사 등 자신의 다른 재산을 지켜야 했고, 또 자신이 계속 버틸 경우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수천명의 종업원이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심경에서 형을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62년 당시 박정희가 1979년까지 20년 가까이 집권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태로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권력을 놓으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첫째 박정희의 지시 여부와, 둘째 재산 헌납의 강제성 여부다. 먼저 박정희의 지시를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2000년〈진주지〉에 기고한 글에서 박정희의 직접 지시로 김지태를 구속하게 되었다고 회고했으나, 뒤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의 글이 주목을 끌게 되자, 박정희의 지시란 ‘알아보라’는 정도였다고 한발 물러났다. 진실위원회는 당사자의 조금 다른 주장 중에서 별다른 외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나온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관계자들은 김지태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부산지부가 입수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수사계획서 같은 문건은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박정희가 부산을 다녀가기 직전 부산지부가 작성한 ‘정치인 실태 내사서’에 김지태에 대해 부일장학금 지급으로 국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부정불신 사실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가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측은 김지태가 재산을 자진 헌납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김지태는 이미 석방된 직후부터 기획장김유택을 찾아가 “선의의 기증 행위가 아니라 강제로 약탈당한 것이니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전제왕국 이조시대에도 이러한 행위는 없었다고 분개한 것이 1962년 7월31일지 경찰 정보보고에 나와 있다. 이 밖에도 김지태는 1962년 9월, 1963년 12월, 1971년 7월, 1980년 4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 증거가 뚜렷이 남아 있다. 사실 김지태의 경우 재산 헌납의 강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길 때 강도가 내 주머니를 직접 뒤져 지갑을 빼앗아가면 강탈이고, 내가 내 손으로 꺼내주면 ‘헌납’이나 ‘회사’일까? 부일장학회 등 사건은 2004년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교적 일반에게 알려졌지만,〈경향신문〉매각은 당시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나 조용히 묻혀버린 사건이다. 오죽하면 진실위원회가 2005년 2월에 7대 우선조사 사건을 선정, 발표하는 자리에서〈경향신문〉사건을 선정했다는데도 기자 중에 왜 언론 사건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질문까지 나왔을까? 1974년 말에서 1975년 초의 3개월가량 진행된〈동아일보〉광고 탄압 사건 같은 것이 박정희 정권 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으로 알려졌지만,〈경향신문〉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지독했다.〈동아일보〉때야 그래도 민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고, 사주가 간첩으로 몰려 감옥에 가지도 않았으며, 신문사 소유권이 바뀌지도 않았다.〈동아일보〉사주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도 어쩌면〈경향신문〉사건의 학습효과가 아니었을까?〈경향신문〉사건은 사장이 간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황에서도 1년 가까이 버티다 보니,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탄압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한놈만 패기 작전

당시〈경향신문〉이준구 사장은 원래 언론인 출신이 아니었고, 신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비상한 수완이 있는 사업가였으며, 어떻게 해야 신문이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먼저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했고, 젊은 기자들의 비판적인 기사를 적극 후원했다. 이런 적극적인 비판 논조는 정권지로서〈경향신문〉의 존재를 부각시켰고, 박정희는〈경향신문〉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게 되었다. 사실 박정희는 김지태의〈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빼앗을 무렵,〈경향신문〉을 인수하려 한 적이 있었다.〈부산일보〉나 문화방송과는 달리, 박정희는〈경향신문〉은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경향신문〉이 김지태와 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천주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소유였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친구이자 천주교측에도 신망이 높았던 시인 구상을 내세웠는데, 천주교측에서는 구상과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지금이 박정희에게서 나온 것을 알고는 계약을 파기했다고 한다. 이때는 삼성의 이병철도〈경향신문〉인수에 뛰어들었는데, 당시〈경향신문〉에 많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사장직에 오른 이준구가 천주교 유지재단 이사장 노기남 주교의 백지위임장을 편법으로 사용해 자신이 인수해버렸다.〈경향신문〉의 인수에 실패한 뒤 이병철은〈중앙일보〉를 창간했지만,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경향신문〉을 빼앗아버렸다.

김형욱은 박정희가 젊은 기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못 견뎌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는 한-일 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면서 언론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강행하려 했다. 이 법안에 대해〈경향신문〉등 4개 신문사가 끝까지 저항하자 정부 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 용자 제한, 신문 수송 기피, 신문인들의 사생활 정보 수집,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했다. 당시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들의 공동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악랄한 수법은 일찍이 일제 때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박정희가 법안의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해 외형상 언론계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는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속성과 대응 양식, 그리고 악점을 파악해 더 효과적인 언론대책을 준비했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경향신문〉사건이었다. 박정희는 언론계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던 1964년과는 달리 1965년에 접어들자〈경향신문〉하나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영화〈주유소 습격 사건〉의 무대포 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난 한놈만 패!”〈경향신문〉사장 이준구는 1965년 5월8일 간첩방조·불고지 등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구속됐다. 그 전년 가을에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어 길을 닦아놓은 셈인데, 이준구는 단순한 반공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그 당시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분리돼 있었는데, 고무찬양 등 비교적 가벼운 죄는 반공법에 해당했고, 국가보안법은 진짜 살벌한 사건에 적용됐다)으로 그 길을 포장한 셈이다. 신문사나 방송사 사장이 어디 보통 자리인가? 전에 ‘간첩의 추억’《한겨레21》521, 523, 525호에서 얘기한 1970~80년대의 조작간첩 사건이란 것이 대개 힘없고 ‘백’ 없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납북 어부들이나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주로 희생양이 되었다면, 1960년대에는 신문사·방송사 사장 같은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의 먹이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위로부터 길들여져갔다.

실체조차 없는 <경향신문> 간첩 사건 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두개의 간첩 사건과 연결지었다. 한 건은 당시 <경향신문> 체육부장으로 있던 이형백 사건인데, 이형백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 아닌데, 이준구를 엮어넣기 위해 핵심인물인 것처럼 발표됐다. 이형백은 법정에서 자신이 이준구를 포섭할 임무를 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래도 이 간첩 사건은 이준구 부분을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지만, 실체라도 있었다. 실체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은 당시 <경향신문> 도쿄지사장이던 재일동포 윤우현을 핵심인물로 한 간첩 사건이다. 윤우현은 이준구가 구속되기 훨씬 전인 1964년 12월 25일 가족과 함께 북송선을 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모종의 간첩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일본을 탈출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 도쿄파견관은 본부에 윤우현에 대해 일본 경찰은 윤우현이 일본 내에서의 간첩 사건에 관련됐다는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일본을 떠나 북으로 간 사실도 주일한국대표부의 통보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윤우현은 간첩이 되었고, 그를 도쿄지사장에 임명하고 지사장인 그에게 신문을 보내준 이준구는 간첩방조죄에 불고지죄가 더해진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요인 동태 관련 문건에 사상관계에서 늘 온건, 건전, 민족주의 확고라는 평가를 받아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준구를 잡아넣고 중앙정보부는 거래은행에 압력을 넣어 <경향신문>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자만 제때 내면 상환일을 자동 연장해주던 관례를 무시하고 불과 2~3일의 여유를 주고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고를 보냈다. 중앙정보부가 문안을 작성해주었는지라 3개 은행이 보낸 상환통지서는 금액과 날짜만 다를 뿐 본문은 토씨까지 똑같다. 국회에서 발췌하자 김형욱은 사장이 간첩죄로 잡혀들어가기, 채무자들이 불안해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문사는 사상 초유로 경매에 부쳐졌다. 이준구의 부인 홍연수는 이 경매에 입찰해 <경향신문>을 다시 낙찰받으려고 입찰금을 준비했으나, 중앙정보부는 이 돈이 북에 간 윤우현에게서 온 것이라며 동결해버렸고, 1966년 1월 25일 <경향신문>은 박정희와 동향으로 이 경매에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넘어갔다.



중정부의 협박을 녹음한 '여걸'

그러나 홍연수는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앙정보부가 초조해졌다. 이준구의 구속 수사를 담당한 부국장 김모 검사는 이준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홍연수를 협박했는데, 여걸 홍연수는 김모의 협박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했고, 김상현 의원은 이를 국회에서 폭로했다. 지금 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천하의 중앙정보부가 오히려 한 여인에 의해 녹음을 당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준구 부부는 1966년 4월 <경향신문>을 포기했고, 이준구는 며칠 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부분은 무죄를 받고,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만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김형욱이 약속한 그대로 형량을 받고 풀려났다. 홍연수에 따르면 이준구가 석방된 뒤 김형욱이 찾아와 "이게 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짓"이라며 "당신 딸깍이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빼앗겼느냐, 그게 빼앗아 5·16 장학회에 다 갖다줬다.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이 공식적으로 5·16 장학회 소유가 된 것은 1974년이지만, 실상 김형욱의 말처럼 박정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더 일찍이었던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전두환이 나온 것이다. 정치정화법에, 부정 축재자 처리에, 강대 순화교육(삼정교육)에, 언론사 통폐합에, 그리고 5·16 장학회를 모델로 한 일해재단까지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됐다. 김지태에게서 언론 3사를 빼앗고, 1962년에 인수하려다 실패한 <경향신문>도 결국 손에 넣고, 영남대학까지 갖추었으니, 박정희여, 그 얼마나 청렴한고? 이런 단단한 노후대책(?)을 마련해놓고도 무엇이 부족해 권력에 그리 연연하다가 총을 맞아야 했을까?

